

통합적 가정정책

: 선언과 실천

송 혜 림(울산대학교)

I. 들어가기

하나의 독자적 학문분야로서 가정관리학은 그동안 통합성 그리고 실천성을 큰 축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연구의 관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가정관리학의 통합성과 실천성은 늘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 있는 미완의 혹은 여전히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이슈인 동시에 관심사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동안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학문에 대한 전공생 및 사회의 요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등에 부단히 적응하며 통합성과 실천성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대응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문화·세분화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학과명칭 변경과 전공생의 취업 증진

둘째, 복지적 관점의 도입과 적용(가정복지의 재개념화와 활성화)

셋째, 정책(제도, 법, 전달체계 등) 연구의 활성화

가 그것이다. 시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위 세 가지 대응전략은 때로는 상호 간에 상충적이면서도 때로는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추진되어 왔다.

먼저 분업화·전문화의 과정에서 학과명칭 변경이나 자격제도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실천성을 강화하고자 한 일련의 노력은, 한 편으로는 졸업생의 취업, 학과 지원율 등에서 가시적 효과를 드러낸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학문의 파편화, 소재 중심의 연구 등의 한계도 드러낸 바(송혜림, 2007 ; 노영주 외, 1999), 이는 본격적인 통합성 논의의 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결국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전문화·분업화는 타학문분야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정영금, 2007) 뿐 아니라 고유한 연구대상, 독자적인 패러다임 등의 차원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의 하나가 복지적 관점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화·세분화로 인한 통합성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복지’의 재개념화와 복지패러다임의 강화를 통해 하위연구분야들이 가정복지를 하나의 공통적 지향점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동시에 복지적 관점의 도입과 적용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적 향상 및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복지(wellbeing)를 목표로 한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지향성이 복지사회에 대한 요구, 삶의 질

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의 요구로 이어지는 사회정책 논의와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레 발전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복지적 관점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정을 둘러싼 거시체계 및 정책에 대한 관심도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복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제 도적,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차원의 것이므로, 복지에 대한 관심은 곧 행정·제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직결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가정학, 가정관리학은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정책아젠다 개발, 전달체계의 운영, 관련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이라는 보다 실천적 연구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가정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미 가정관리학 자체가 통합적, 실천적 연구를 지향하는 학문으로 규정되는 바, 사회기여를 위해서도 가정정책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정영금, 2007). 실천성 강화의 한 방향이,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의 구체화와 가시화, 전달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 양성 및 배출 등이라면, 또 다른 한 방향은 바로 정책적 연구라고 할 것이다. 가정생활은 어제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일상성의 핵심인 까닭에 일상생활에서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를 추출하며, 이러한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다양한 연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지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와 환경, 국가정부의 정책수립 방향성 역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의 결합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정정책은 가정관리학의 통합성을 반영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실체라고 볼 수 있다. 통합적 가정정책의 산물인 건강가정기본법이 그러하듯이, 가정정책은 개인 혹은 가정생활의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 기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책에 대한 관심은 가정관리학의 통합성과 실천성을 향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시에 통합성과 실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늘 ‘통합적 가정정책’이라는 주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가정관리학의 발전적 과제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통합적 가정정책’에 주목하여, 그동안 무엇을 연구했는지 그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성 및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정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선언적’ 측면을 뛰어넘어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정정책은 단편적이고 협소한 복지정책의 하위분야가 아니라 사회정책의 핵심영역이라는 또 하나의 ‘선언’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II. 가정정책의 개념과 정책환경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와 하위체계들, 현상들은 가정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기에, 가정정책의 명확한 개념과 범주 규정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다. 가정정책과 관련되는 개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가정생활복지정책 : 한 단위로서 가정의 안녕과 복지 달성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갖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개입활동(조희금 외, 2008).
- 가족정책 :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Kammerman & Kahn, 1978). 가족에 영향을 주는 정책(박민자, 2001).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시행과 집행의 결과를 가족과 관련시키는 관점을 가지는 정책(변화순, 2005).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대책(김성천·안현미, 2003)(이상 조희금 외, 2005 ; 조희금 외, 2008 재인용).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처나 행동(조흥식 외, 2006).

최근 연구에서 가정정책은 가정의 역량 강화 및 가정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추진되는 정부의 활동과 대책(송혜림 외, 2007)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가정정책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분석해 보면, 특히 우리 나라에서 60년대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정도에 국한되었던 가정정책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현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결혼을 감소와 이혼을 증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확산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 놓여 있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의 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취업을 향상,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사회정책과 복지제도를 넘어서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복지레짐(국가와 시장, 가족 사이에 복지의 생산이 배분되는 방식)이 주목하는 바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재편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윤상우, 2008). 즉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가정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 요소가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정책과 사회정책이 조응하는 구도를 나타낸다. 즉 가정을 둘러싼, 그리고 가정 자체의 속도 빠른 역동적 변화는 가족의 위기인가 변화인가의 논쟁을 활성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가정은 지금까지처럼 사적인 영역으로, 가만 놔 두어도 알아서 잘 기능하는 생활단위로 결코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제도와 정책의 범주로, 즉 공적 이슈로 자리매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가족,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인구적·가족적 변화는 가정정책을 활성화시킨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조희금 외, 2008).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취업 향상,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등은 그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되 대부분의 사회가 국가정부의 차원에서 가정정책에 관심을 갖게 만든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의 가족정책 패러다임도 변화하였다. 호주, 미국의 경우 가정정책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 대한 전반적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유럽의 경우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면서 가족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남성의 부모권 확장, 미혼모 지원, 동거가족 지원 등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가정정책의 맥락에서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단일법을 만드는 추세이며, 동시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맞물리며 복지정책이 이와 연계됨으로써 포괄적인 아동·가정정책으로 회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송혜림 외, 2007).

Ⅲ. 통합적 가정정책

: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왔는가?

가정정책의 개념에 이어 이제 본 연구의 주제인 ‘통합적 가정정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동안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왔는지 정리해 보자.

정책연구의 활성화와 함께 최근 가정관리학 분야에서도 가정(족)정책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데, 예컨대 여성학 분야에서 ‘성인지적 가족정책’이라는 용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면, 가정(관리)학에서는 ‘통합적 가정정책’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통합적 가정정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때로는 동일하게 또 때로는 서로 차별적으로 이해·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통합적 가정정책은 기존에 개인, 즉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위로서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차원이 강조되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의미로, 또 다른 경우에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의식주생활, 가족관계, 자원관리, 부모역할, 소비활동 등) 혹은 인적 체계와 물적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때로는 가정문제 해결과 예방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으로, 더 나아가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근 연구(김경신 외, 2007)에서는 연구자,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적 가정정책’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델파이조사를 통해 정리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생애주기, 생활주기를 포괄
- 다양한, 모든 형태의 가정을 포괄
-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 포괄
- 가족구성원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통합
-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의 통합
- 성별, 세대 등의 통합
- 가족문제 해결과 예방을 동시에 추구
-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통합
- 개인이 아닌 가족의 전체성 강조
-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의 접근방식의 통합성

이와 같이 ‘통합적 가정정책’의 개념과 범주는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통합적 가정정책은 위에서 열거한 각각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의 통합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보면, 통합적 가정정책은 다른 정책의 보조수단 혹은 다른 정책에 편입되는 부분적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성(체계)로서의 독립적 정책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생애발달론적 맥락에서 가족원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방성, 장기성, 보편성, 일상성, 개발성, 전체성 등이 요구된다는 차원, 그리고 인간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인간생태학의 매트릭스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종합적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맥락, 마지막으로 건강가족적 관점에서, 가정의 건강성을 핵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가정정책의 통합성이 강조되고 있다(정민자, 2004 ; 김경신 외, 2007).

결국 통합적 가정정책이 가정(관리)학적 관점에서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정책적 패러다임이라면, ‘통합적’이라는 의미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통합적 가정정책의 아젠다 그리고 실천전략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에서도 이 통합성은 인적체계와 물적체계의 결합, 문제발생과 해결의 다차원적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 가족치료, 개별사회사업, 케이스워 등에 적용되어 왔다(김연명, 1999). 그렇다면 가정관리학에서 강조해 온 통합적 가정정책이 가정관리학의 전문성이나 독자성을 나타내교 타 학문분야와의 비교우위에서 서서 가정정책에 대한 확고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통합성’의 개념과 유용성에 대한 더 면밀한 연구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IV. 선언적 의미에서의 가정정책 그리고 실천전략

지금까지 가정정책과 관련된 연구의 내용은 상당 부문 선언적 차원의 내용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선언적 맥락은, 한 편으로는 가정문제가 심각해 지고 가정의 돌봄기능이 취약해 지니, 가정을 이제 사적 영역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국가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긴급성에 대한 주장이고, 또 한 편으로는, 그동안 가정생활을 핵심적 연구대상으로 해 온 가정(관리)학이 가정정책 연구에도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혹은 해야겠다는 당위성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미 가정복지 및 정책 관련 연구의 지난 역사를 보면, 정확히 10년 전,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기 선언적 주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논의된 바 있다.

“(이제) 가정학이 근본적으로 가정복지 실현을 추구해 온 학문이므로 복지 연구 및 교육에 적합하다는 자기선언적 주장만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가정학이 어떤 측면에서 가정복지를 연구·개발하는 데 적합하고, 실제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정복지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여를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가정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내부적, 외부적으로 설득해야 한다”(송혜림, 1999).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던 가정복지기본법(안) 그리고 그것이 확대개편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가정(관리)학자들 및 관련자들의 노력과 참여, 응집력 등은 가정(관리)학이 가정정책연구의 핵심적 주체이고 중요한 파트너라는 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선언은 학문공동체 내 혹은 관련되는 연계체계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나아가 ‘선언’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영역에서 어떤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해 왔는가가 중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도 그동안 가정관리학자들이 주축이 된 일련의 정책연구들¹⁾은 가정정책 영역에서 가정관리학의 이론적 기여를 가시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합적 가정정책의 산물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현장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건강가정사업을 활성화시키며 건강가정사를 양성·배출하여 전문인력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가정관리학(자들)이 보여준 관심과 참여, 노력은 가정정책을 향한 실천적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선언적 차원에서의 가정정책이 보다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높은 단계의 구체적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통합적 가정정책이라는 지향성의 차원에서 상징성을 갖는 건강가정기본법과의 연계 속에서 구체적인 사업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미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안), 이혼절차특례법 등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독자적인 법(안)으로 제정되었고 또 제정되는 과정에 있다. 이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실천방안이나 특히 전달체계 활용 면에서 건강가정기본법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결국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목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정정책의 역사를 주도해 온 가정관리학자들이 개별적인 하위법과 사업법의 제정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기본법과 하위법 및 사업법 간 연계와 조정 그리고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정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규정함에 있어 가정관리학의 실천성과 통합성, 거기에 더하여 전문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녀양육지원법, 부모역할지원법 등은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 뿐 아니라 법과 제도, 행정의 영역에서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가정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에서 강조한 바 통합성이라는 맥락에서 관련되는 사안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가정관리학자들의 전문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 때 통합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체계에 적용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정책 추진의 공적 전달체계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전담조직(행정)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먼저 행정조직의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가족정책의 전담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직제²⁾는 통합적 가정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줄곧 지적해 온 개인 대상별 접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정책 전담부서의 위상도 매우 미흡하다. 아무리 지방분권화가 추진 중이라 해도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러한 전달체계 조직구성 방식은 우리 나라 전반의 가족정책 기획 및 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 우려된다. 현실에 대한 우려, 불만 그리고 결핍감은 곧 미래지향적 기획의 출발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현 전달체계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보다 장기적인 맥락에서 통합적 가정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전달체계의 구성방식에 대한 제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정정책(정민자, 2004), 통합적 가정정책(정민자, 2004 ; 2007), 양육지원정책(김선미, 2005), 가족친화정책(최성일·유계숙, 2006), 가족정책(정현숙, 2006), 일-가족 양립 정책(정영금, 2007),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기영 외, 2004),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가정정책 발전방안(송혜림 외, 2007),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가족지표 개발(김경신 외, 2007) 등, 이 외에도 다수 있음
2) 부록 1 참조

또한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적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적 가정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시범사업과 함께 출발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길지 않은 역사지만, 이제 더 이상 초기 단계 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양적인 숫자의 확산, 홍보, 자리매김 등의 과제에 직면했지만, 이제는 내실화, 건강가정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지속적 품질 개선, 공적 전달체계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송혜림, 2008a). 무엇보다 애초에 기대했던 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독자적인 서비스를 부각시켰는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 관련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적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기획 및 추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참여는 주체 혹은 파트너로 인정될 때 가능한 것이다. 가정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다른 학문분야 등이 가정관리학을 가정정책의 주체로 또 파트너로 인정하는가는 결국 가정관리학 스스로를 가정정책의 주축학문으로 규정한 선언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얻어냈는가를 알려주는 단초가 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미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 가정정책 연구성과들, 다양한 형태 정책과정 참여 등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정관리학 전공생, 졸업생들이 정책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 가정관리학 연구자 및 관련자들이 주축이 된 조직화가 필요하다. 가정정책 포럼³⁾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가정관리학의 학제적 성격, 거버넌스체계의 중요성, 네트워크와 협업시스템을 강조하는 문화 등은 가정관리학만의 배타적인 조직 구성보다는 타학문분야, 다른 기관과의 경계를 허물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요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정책 포럼을 주체적으로 구축하고 추진하되 다양한 구성원과의 상호소통을 통해 외연적 경계를 확장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 가정정책에 대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적용과 과제

- 사회정책과 가정정책

가정관리학자들의 최근 가정정책 연구는 사회정책의 하나로 가정정책을 규정하면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통합적 가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의 한계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문화를 양산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의 방향 전환, 즉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을

3) 그것이 어떤 형태이던 간에, 예컨대 오프라인상의 모임이나 시민단체이건, 아니면 저널이나 연구지, 학술지의 형태건 상관 없이 가정관리학 관련자들이 주축이 된 가정정책포럼이 하나의 조직으로 또 실체로 가시화되어야 가정정책의 주축학문으로 가정관리학의 위상을 보다 견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성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와 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고,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세대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신뢰와 애정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을 추구할 가족생활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정정책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문화와 제도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송혜림 외, 2007)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정책의 핵심이 되는 사회적 시민권의 차원에서 가정정책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족정책은 국가의 인구조절, 사회 통합,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개별적인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정책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가정학실천특위, 2008).

사회정책은 가족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다(윤상우,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의 한 영역으로 가정정책에 주목할 때 사회정책의 기초와 추세를 정확히 판단해야 가정정책의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성장과 분배의 양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2009년도 예산 계획은 복지를 축소하고 성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여(야후뉴스, 2008), 결국 여전히 선진화된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삼스럽게도 실용과 경제가 또 하나의 사회적 코드로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친화정책이 각광받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가 산적하다.

결국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정책과 복지제도가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 개념에 입각한 제도적 복지국가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잔여적 성격에 매몰되어 있다(윤상우, 2008). 이 모든 사회현상은 개별가정을 압박하는 요소임이 분명하기에, 가족정책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의 경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해 인적자원의 질 향상, 사회안전망 강화, 일-가정 양립, 적극적 노동시장, 사회서비스 확대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신동면, 2007), 이는 사회정책과 가정정책의 직접적이고도 긴밀한 연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가정정책이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 정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변화

특히 최근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사회투자이론, 예방의 중요성 등이 가정정책에 접목·강조되고 있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투자론을 가정정책에 적용할 때, 가족은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이며, 사회투자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정책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인적 자본을 재생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강조점이 핵심이다(김경신 외, 2007 ; 가정학실천특위, 2008).

원래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은 복지가 갖는 투자적 성격을 중시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그것은 현금급여로 대변되는 소득보장지출을 억제하고 보육을 비롯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예방적, 투자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순, 2007). 상술한 복지레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대와 일자리 양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취업을 증가, 한부모가족 증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족구성원의 역할변화 및, 인구고령화 등은 가정정책의 활성화를 이끌어낸 주요 정책환경이면서 동시에 복지국가의 위기와 개편 논의의 계기를 가져다 주었고 또 동시에 사회투자국가론을 본격화시킨 사회적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윤상우, 2008 ; 김영순, 2007). 즉 개별가정이 처한 경제적 위기, 여성취업을 향상, 그리고 가족의 변화는 가정정책과 사회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공적 이슈임을 알 수 있다.

사회투자이론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기에 ‘아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그러므로 상술한 바 선진국가들의 가정정책 기조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다양한 형태의) 가정’ 을 중심으로, 즉 아동·가정정책으로 회귀되면서 여기에 복지정책이 연계되는 포괄적 정책으로 자리매김되는 현상도 결국 사회투자국가적 정책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의 복지제도가 선가족 후사회의 맥락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준거로 저소득 정상가족 및 정상가정에서 이탈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회투자론적 정책에서는 맞벌이가구를 준거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전제 혹은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채널의 전달체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김혜원, 2007), 사회투자론은 현재 맞벌이가정의 보편화현상과 작은 정부, 거버넌스체계로의 이행을 시도하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 가정정책에 대한 적용성이 크다는 점은 일단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거쳐 지난 참여정부 시기에 부각된 개념이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지난 10년 두 가지 패러다임을 수립하였는데, 1999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이 상징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나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사회투자국가’가 그것이다(박영란, 2007).

여기에서 생산적 복지는 전통적인 복지와 달리 국민들의 능력을 제고시켜서, 세계화의 거친 경쟁 시대에도 국가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 즉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를 의미한다(조성한, 2002). 이 적극적 복지는 잘 알려진 기든스가 제 3의 길에서 주장한 바를(영국에서) 일을 향한 복지로 적용한 것이며, 이는 곧 생산적 복지, WORKFARE(또는 Welfare to Work)를 의미한다(Giddens, 1998 - 김운태, 2005 재인용). 또한 그 다음 참여정부에서 추진코자 했던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적인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교육·직업훈련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정책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성장전략으로 정의된다(임채원, 2007 - 박영란, 2007 재인용). 이 사회투자론적 패러다임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복지 전략의 하나이다(박영란, 2007).

이처럼 생산적 복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온 과정을 거쳐 이제 새 정부의 가정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능동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능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을 의미한다(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시장기능에 복지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공급자 중심의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예방·맞춤·통합을 강조한다(www.naver.com).

그러나 아직 새 정부 능동적 복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지 구체적 실천계획은 부족하다. 사회적 위험의 예방이라는 면에서는 사회투자론적 패러다임의 연장이기도 하고, 근로와 노동 그리고 경제가 부각되는 면에서는 생산적 복지의 연장으로도 보인다. 수요자 중심의 예방·맞춤·통합적 서비스는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업이 실천해오고 있는 것이며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시화시켜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능동적 복지가 새 정부의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 정책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정책목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회투자론으로의 흐름에 대하여,(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사회투자정책의 주요적인 근로능력을 가진 비활성화된 복지의존층(청년실업자, 독신모, 장기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투자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김영순, 2007)도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충분한 삶의 질’을 누려본 적이 없으므로 대한민국형 사회정책 패러다임 발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가정정책에의 적용

다시 가정정책으로 돌아가,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과정과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분석하여 가정정책이 이에 조응하는 방식,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책기획과 수립에서는 국가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재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부가 아직 가정정책의 향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마당에, 가정정책연구의 주축학문인 가정관리학의 정책제안과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능동적 복지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⁴⁾으로 주무부처는 포괄적 가족정책 강화, 보육정책 개편,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비하는 어떤 가족정책이 필요한지 여전히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보육·아동·청소년·노인 대상의 분산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인하여, 지금까지 줄곧 비판받아온 개별 대상에 대한 단편적·분절적 가족정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우리 나라 가족정책의 난이점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주의적 가족정책에의 정도, 위기가족에 대한 잔여적 복지정책의 한계, 인구정책·보육정책·노동정책 그리고 아동정책·청소년정책·노인정책 등 정책대상의 분절화 등을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나아가 가정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있으나 분명하고도 구체화된 전략은 충분치 않으며, 자녀양육정책은 매우 나열적이며 분산된 상태이고 여기에 복지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통합적 가정정책을 위한 보다 명확한 틀과 패러다임 그리고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가정정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며, 자녀양육정책은

4) 관련되는 자료는 <부록 2> 참조

분산되어 있고, 복지정책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한계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하겠다(송혜림 외, 2007). 특히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볼 때에는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 개별 대상에 대한 정책과 보육,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이 일정한 연계체계나 조정 없이 나열되고 있어, 이로 인한 혼란 그리고 중복과 누락 등의 문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해결해야 효과적인 가정정책 추진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특히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와 관련하여, 기다리지 않게 찾아가는 능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부각된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원스톱 복지전달체계(에이블뉴스, 2008)에 대한 논의 그리고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하여, 기존의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2008). 일견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전달체계의 개편은 필요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기존에 지역사회에 설치·운영 중인 전달체계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정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통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원스톱 전달체계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 또 다른 전달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복지전달체계’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예산의 낭비이며 실용정부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무엇보다 ‘복지’라는 용어로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편향된 시각이 가장 본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정책과 복지제도를 넘어서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복지레짐(국가와 시장, 가족 사이에 복지의 생산이 배분되는 방식)(윤상우, 2008)을 복지정책과 동일시하는 왜곡된 관점에서 벗어나고, 가정정책을 단편적이고 협소한 복지정책의 하위분야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사회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정정책연구의 주축학문인 가정관리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가정정책의 위상을 적실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 가정관리학의 과제

이러한 맥락을 정리하면, 가정정책과 관련하여 가정관리학이 직면한 우선적 과제는, 무엇보다 가정정책을 사회정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패러다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통합적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러하거니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건강가정사업에 대해서도 가정정책의 산물일 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산물이며, 동시에 가정정책과 사회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건강가정사업은 단지 가족서비스일 뿐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서비스’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사업의 대상과 범주, 목표가 단지 가족, 가정을 타깃으로 할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 또 전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건강가정사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선언적 주장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사회적 서비스와의 관계와 영향을 주고 받는 방식이 거시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체계와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시점에, 건강가정사업은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사회

정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대상도 전체 사회정책의 기초가 주목하는 정책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 사회정책과 복지정책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인 복지레짐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은 대부분 가족, 가정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다. 여성취업을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 및 형태의 다양화 등은 앞으로도 한동안 더 가정정책과 사회정책의 기초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정책과 사회정책에서는 가족-시장-국가 간의 관계 분석을 전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출산환경의 개선, 사회통합 등 주요 정책아젠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정부 쪽에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신동면, 2007). 이 제도적 장치는 ‘누군가’ 마련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가정관리학자들 스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정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기여가 전제된다. 결국 가정관리학이 가정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의 핵심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보다 조직적인 응집력을 구축하여 가정정책, 사회정책의 주축학문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즉 우리의 선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제와 동일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실용정부가 주장하는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게다가 미래를 지향하는 가정정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런 상태에서, 가정관리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보다 앞서 사회 전반에 걸친 경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이로써 사회정책과 가정정책의 향방을 제시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정정책, 사회정책을 둘러싼 구도에서 가정관리학의 경쟁력은 ‘가정생활’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가정관리학의 초창기부터 개인, 가족, 사회의 복지증진을 학문적 목표로 하였으나, 이 때의 복지는 제도로서의 복지가 아니었으며, 정책에 대한 관심도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 복지후진국이었던 우리 나라는 한동안 사회적 위험의 회피와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망으로서, 그리고 제도적 장치로서 복지에 집중해 왔고, 여전히 복지선진화가 과제이기는 하나, 이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는 거기에서 훨씬 앞으로 나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복지이며, welfare가 아니라 wellbeing에 대한 추구이다. 이는 생활양식이며 하나의 문화이다(송혜림, 2005). 그래서 결국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회귀된다. 이는 지속가능성, 공동체문화, 보호와 절약 그리고 보살핌과 돌봄, 일과 여가의 균형 등에 대한 관심과 맞물린다(송혜림, 2007a). 이는 곧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호혜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사회적 단위, 즉 가족, 가정생활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며,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속해 온 가정관리학의 패러다임과 전문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는 현재 날마다의 치열한 사회생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까닭에, 극도의 이기심과 개인주의, 배려와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타심, 도덕심, 배려, 협력, 신뢰, 이해 등 사회적 자본(송혜림 2007a 재인용)의 부족 따라서 결핍감이 확산되고, 그러므로 자연스레 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은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원래 자발

적인 돌봄의 공동체이다. 이타심과 배려, 협력, 이해와 신뢰를 터득하고 체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단위라는 점에서, 가정은 사회적 자본 그 자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가정정책은 가정의 이러한 돌봄기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가정관리학이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것이다. 앞으로 사회의 경쟁구조는 더 심화될 것이며, 그럴수록 가족이기주의가 비난받고, 가족의 반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도 팽배해질 수 있다. 돌봄의 기쁨을 누릴 사이도 없이 돌봄의 부담이 자리잡게 되며, 이로써 출산과 육아의 포기가 저출산과 직접 연계되기도 한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고령화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가정의 돌봄기능은 더 큰 도전 앞에 놓여질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술,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도덕감 등은 생애 초기부터 가정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가치들이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체득한 이러한 가치들은 곧 사회로 연계되는 까닭에 사회문제와 가정문제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인식, 가족이기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해치지만 결국 가정에서 체득한 협동과 이타성, 약자에 대한 보호, 자발적 돌봄의 정도가 그 사회 공동체의 문화적 수준과 삶의 질 그리고 성숙함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경험은 가족을 다시 보고 새롭게 보게 하고 있다(송혜림, 2008b).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즐거움,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삶의 질, 일과 여가의 균형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가정관리학의 가정정책 연구가 제시하는 바, 가정의 돌봄기능이 시장과 국가 간 재분배되는 방식,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가정정책이 연계되는 정책아젠다, 가정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 전략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가정학실천특위(2008). 보건복지가족부 하의 가족정책 재정립 방안. 미간행 문건.
- 김경신 외(2007).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가족지표 개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 기획과제 연구보고서.
- 김선미(2005). 돈 버는 여자, 애 못 보는 남자 : 양육지원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37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9-137.
- 김연명(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자료집.
- 김영순(2007). 영국의 사회투자국가 실현 - 이념, 정책, 성과와 한국에 주는 교훈. 사회보장연구 23-3. 171-200.
- 김윤태(2005). 영국 복지국가의 전환 : 사회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사회복지정책 21. 189-215.
- 김혜원(2007). 선진국에서의 사회투자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5(5). 1-3.
- 노영주 외(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73-183.
- 박영란(2007).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와 여성 : 사회적 위험의 확산과 지속되는 위기. 젠더리뷰 2007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 송혜림 외(2007).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가정정책 발전방안. 대한가정학회 정책대

토론회 자료집.

-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5차 총회 및 학술대회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자료집.
- 송혜림(2005). 가정학에서 건강이라는 코드의 재해석과 전망. 2005년도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송혜림(2007a). 생활과학의 발전 전략 - 지속가능한 생활과학, 도전과 비전. 대한가정학회 제 60차 하계학술대회 ‘생활과학 연구와 윤리’ 자료집.
- 송혜림(2007b). 가정의 날에 건강한 가정을 다시 생각하며... 울산대학교 홍보자료집 2007년 5월호.
- 송혜림(2008a). 건강가정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이해 -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제 1회 실무교육 자료집.
- 송혜림(2008b). 변화하는 가정생활과 복지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미래 사회의 요구와 가정과 교육의 방향’ 자료집.
- 신동면(2007).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한 구상. 사회이론 봄/여름. 137-316.
- 양재진(2007). 사회투자국가의 사회정책패러다임과 사회투자정책 : 영국과 덴마크의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5(5). 4-14
- 에이블뉴스(2008). 이명박 정부 복지이념은 능동적 복지. 2008년 2월 12일자 인터넷판.
- 오향미(2007).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 육아와 직업의 조화에서 육아의 직업화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4(1). 175-199
- 윤상우(200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16(1). 346-389.
- 이기영 외(2004).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탁연구 자료집.
- 정민자(2004).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실천방안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가정정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제 5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가정정책과 실천방안’ 자료집.
- 정민자(2007).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위한 패러다임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가정·생활·정책’ 자료집.
- 정영금(2007). 가정관리학 분야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정영금(2007).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일-가정 균형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 12차 학술대회 ‘일-가정 균형’ 정책과 우리의 일상 자료집.
- 정현숙(2006). 혼인율 특성, 변화요인 분석과 가족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177-193.
- 조성한(2002).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2002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과 신뢰」: pp. 113-126.
- 조흥식 외(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 조희금 외(2008). (개정판)가정생활복지론. 신정출판사.
- 최성일·유계숙(2006). 일-가족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51-73.

www.naver.com

www.yahoo.co.kr

<부록 1> 보건복지가족부 조직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2008년 5월 현재)

<부록 2> 보건복지가족부(2008년) 3월 25일 2008년도 업무계획
: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2008년 5월 현재)